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02호 1판 (음력 4월 15일)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선거 功臣’ 자녀 등 821명 뒷문 입성

〈2010년~2015년〉

‘현대판 음서제’ 전락 무기 계약직 공무원

본보, 전남 22개 시·군 무기계약직 고용 실태 전수 조사
5년 간 증가분의 70%가 6·4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

탐사 기획

시험없이 이력서만 내거나 서류전형 후 면접으로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공시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지만 한쪽에서는 ‘뒷문’을 통해 손쉽게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전남 22개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 실태를 추적 보도한다.

고위공무원, 단체장, 선거 공신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이 선발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4~5년이 지나면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공식업무를 보는 정규직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사무보조, 단순노무 등을 맡는 무기계약직은 크게 늘면서 공직 내부의 질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년전인 2010년 3499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5년 4월 현재 4320명으로, 무려 821명이 증가했다. 시·군 평균 40명 가량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혜택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각 시·군의 기준인건비 산정에도 포함돼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군 실과나 인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아예 최초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무기계약직이 급증했다. 2013년 3744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 4117명으로 373명이, 다시 2015년 4320명으로 203명이 각각 신규로 뽑혀 2년간 무려 576명이 공무원이 됐다. 5년간 증가분의 70%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시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뒷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높여줄 방침이지만, 정작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의 당선을 도운 ‘공신’에게 그 댓가로 자녀, 친인척, 피추천인 등의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전남도가 최근 10개 시·군의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일보 5월 7일자 1면〉

실제로 감사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기간제근로자였던 군수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광양시, 무안군, 고흥군, 곡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목포시, 완도군,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6개 시·군은 하반기까지 감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제42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6일(토) 오전 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서 시상식

김선영씨

윤은숙씨

박영자씨

곽태호씨

이상기씨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42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을 6일 오전 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 김선영씨(상이군경 부문·64·남구 원산동)
윤은숙씨(중상이자배우자 부문·47·북구 본촌동)
박영자씨(미망인 부문·74·광산구 신가동)
곽태호씨(유족 부문·80·북구 문흥동)
이상기씨(특별 부문·84·남구 서동)

주최 : 光州日報社 후원 :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전남에도 ‘메르스 공포’ 확산

전국 15명 확진 속 의심환자 1명 검사 중
정부 관리체계 부실 … U대회 악재 우려

광주·전남지역에도 중동발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회 개최를 한달여(D-32일) 앞둔 광주U대회 조직위도 대회 흥행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권(MERS·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조치된 2명 중 20대 여성만 이날 오전 11시께 최종 음성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전남에서 이송된 또 다른 의심환자는 1차 음성판정 후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퇴원한 여성은 지난 27일 전북에서 스스로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한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가 광주시 보건당국에 의해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격리됐다. 자칫 시외버스 탑승객과 터미널 이용객 등 다수의 시민들이 감염에 노출될 뻔했다는 게 의료 전문가의 지적이다. 현재 병원에 격리된 전남지역 의심환자는 지난 17일 서울 모 종합병원에 배우자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가 이 병원을 찾은 첫 번째 메르스 환자(슈퍼전파자)와 3m거리에서 5분 동안 접촉한 후 지난 27일부터 고열과 인후통을 동반한 감기증상을 보였다. 이 의심환자와 접촉한 주민 28명, 직장 동료 7명 등 총 35명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메르스 양성 확진자는 15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주 U대회 조직위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 세계 선수단을 태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의 탑승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회 선수단 운송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자원봉사자 발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 062) 605 - 1115

광주 첨단경찰서 신설

강신명 경찰청장 밝혀
“동부서는 새 부지에 신축”

광주 첨단지구에 광주에서 6번째 경찰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광주첨단경찰서’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며 “2020년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분서(分署) 요구와 관련,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 광주 북구와 광산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경찰서를 신설, 북부경찰 관할 구역 치안수요(인구 45만2800명·총범죄건수 1만8200건)와 광산경찰 치안여건(인구 41만6000명· 총범죄건수 1만5900건) 등을 분산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강 청장 구상이다.

강 청장은 “경찰서 신설을 위한 기간·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부경찰서 신축과 관련, “경찰서 신축 때까지 임시 청사로 옮겨 생활하는데 따른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은 어렵다”면서 “새로 (부지를) 고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광주여대에서 열린 ‘U대회 경찰 전담경비단’ 발대식에 참석, “안전한 대회 준비를 위해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노조는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를 반대합니다!!

63년 전통의 호남 정론지 광주일보는 지난 5월 28일로 20000번째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호남에서는 최초이며, 전국 신문사로는 1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금자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모회사인 대주건설의 부도 이후 근근이 버텨왔지만, 지난해 하반기 한 회사로 묶여 있던 함평 다이너스티골프장 회원권 반환 요청으로 경영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광주일보는 법에 따라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최근 매각을 주관하는 회계법인을 정하여 광주일보를 이끌어갈 기업의 투자 의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만간 광주일보의 새 사주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언론계에 부작용만 낳은 건설업체 신문사 인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며 제 자리를 지켜온 광주일보는 지난 2003년 말 대주건설의 인수 후 미흡한 지원과 과도한 편집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호남 최대 정론지라는 자리를 위협받았고, 결국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주건설은 광주일보를 건설업체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전통과 역사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이 때부터 광주일보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부실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지역 신문사 인수 및 경영 참여는 비단 광주일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광주 · 전남지역에도 우후죽순 신문사들이 생겨났고, 그 대부분에 건설업체가 관여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열악한 지역 언론의 현실에서 묵인되었고, 결국 이는 지역 언론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새 사주를 받아들인 한국일보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일보 노조는 과거 대주건설의 경험, 건설업체의 지역 내 신문사 경영 참여로 빚어진 부작용, 한국일보의 건설업체 배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체는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통하여 광주일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새 사주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광주일보를 인수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반드시 이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노조는 광주일보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일조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 제도적 조치는 물론 지역사회 각계와의 연대를 통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영업 등의 양도)에 따르면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법원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일보의 새 사주를 결정하는데 있어 퇴직금 등으로 최대의 채권자가 된 광주일보 노조의 이 같은 기준 제시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호남 정론지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광주일보에 닥친 이번 위기는 공정하고 부끄럼 없는 언론으로 거듭나는 기회이며, 따라서 광주일보 노동조합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새 사주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일보 노조는 광주일보를 수단화하려는 모든 의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새 사주는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역사성과 미래 발전가능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의 역사와 전통 그 자체이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할 언론사인 광주일보를 인수하려는 새 사주는 그만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의 이번 위기는 지역 언론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이어야만 합니다.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3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광주일보가 미래에도 여전히 호남 대표 정론지이면서 동시에 지방 명문 신문사로 명실상부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구성원을 전원 승계하는 것은 물론 장 · 단기 투자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수자금이 광주일보를 위하여 쓰일수 있도록 광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광주일보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앞으로의 투자 계획 및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인수자금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아 언론의 공공성 증진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외 요소, 즉 편집권 독립, 신문의 영속성, 고용 승계 보장 등에 대한 평가가 새 사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일보 노조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히 광주일보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의 이해와 기대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개 기업의 새 사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언론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 역시 호남 최대의 정론지인 광주일보의 새 사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여 광주일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

광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